

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 국민의 재산을 키워나가겠습니다.
-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15. 7.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경 과	1
II. 금융개혁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4
III. 향후계획	26
[첨부1]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 CEO,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서베이(110인) 결과 (한국갤럽) ...	27
[첨부2] 현장점검반 운용 100일 활동 간의 성과와 에피소드	33

I. 경 과

- ①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3.17, 기자간담회, 취임 5일차)
 -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50개 세부 우선 과제 선정
 - 체감도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현장중심, 해외사례 벤치마크, 상시평가”라는 3대 추진 방식을 함께 제시
- ②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1 추진체계” 구축 (취임 20일차 완료)
 - * 금융개혁회의(3.25), 현장점검반(3.26), 자문단(3.31), 추진단(4.1)
 - * 금감원과 정례적인 협의·소통을 위해 “2인 주례회의” 운영
- ③ 금융개혁회의(6회), 자문단 회의(60회)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확정
 - 금융개혁의 첫 번째 안건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 발표(4.22)
 -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4.23),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5.21) 등 자본시장 개혁 추진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5.18), 빅데이터 활성화(6.3), 인터넷전문 은행 도입(6.18) 등 핀테크(Fin-tech)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술금융 개선(6.9),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6.22)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 ④ “현장·수요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
 - 100일 동안 위원장 현장 방문만 **37회(700여명 참석)**에 이르는 등 금융현장 및 수요자의 의견 적극 수렴
 - * <참고> 위원장, NH지주에서 20개월 동안 45회 현장 방문
 - 신·적·성(신속, 적극, 성의) 원칙하에 금융위·원 「현장점검반」 운영
→ **146개사 방문, 1,450명 면담, 1,934건 제안(수용률 47%)**

참고1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회 차	안 건
제1차 (3.25)	① 금융개혁 추진 방향
제2차 (4.22)	①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③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④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⑤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⑥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현황
제3차 (5.18)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제4차 (6.3)	①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②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③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 ④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 ⑤ 국민채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향
제5차 (6.18)	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②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 ③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④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방안 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⑥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⑦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

참고2

금융위원장 주요 현장방문(37회) 현황

일 시	주요 행보 내용
3.16(월)	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3.18(수)	② 금융감독원 방문
3.19(목)	③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거래소)
3.20(금)	④ 가계부채 실무자·전문가 간담회 (금요회①)
3.24(화)	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 (MARU 180)
3.25(수)	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YMCA)
3.26(목)	⑦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행사 (캠코 서울지점)
	⑧ 금융부문 노조 임원 면담 (YMCA)
3.27(금)	⑨ 보수적 관행채신을 위한 은행 실무자 간담회 (금요회②)
3.30(월)	⑩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핀테크 지원센터)
3.31(화)	⑪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에이피우주항공(주))
4. 2(목)	⑫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4. 3(금)	⑬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관련 은행장 간담회 (금요회③)
4. 8(수)	⑭ No-action letter 활성화 관련 카드업계 방문 (BC카드사)
4. 9(수)	⑮ 창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4.14(화)	⑯ 종합적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부천 서민금융센터)
4.17(금)	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간담회 (금요회④)
4.24(금)	⑱ 사적연금 현장방문 (미래에셋)
4.28(화)	⑲ 은행 준법감시인 현장방문 (외백, 여의도KCC)
5. 8(금)	⑳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은행연합회)
5.11(월)	㉑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5.15(금)	㉒ 금융시장동향 점검 간담회(금요회⑤)
5.19(화)	㉓ 기업공시 관련 간담회(상공회의소)
5.22(금)	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참석
5.27(수)	㉕ 핀테크 센터, 제2차 Demo-day (그랑서울 컨벤션홀)
5.29(금)	㉖ 기술금융 조찬간담회 (금요회⑥)
6. 2(화)	㉗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간담회 (은행연합회)
6. 8(월)	㉘ 기술금융 우수지점 방문 (국민은행)
6.12(금)	㉙ 신용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금요회⑦)
6.13(토)	㉚ 메르스 관련 전통시장 방문 (중곡제일골목시장)
6.19(금)	㉛ 메르스 관련 시장 동향 간담회 (금요회⑧)
6.21(일)	㉜ 메르스 관련 전통시장 방문 (신영시장·월정시장·신월3동 골목시장)
6.22(월)	㉝ 은행장 감담회 (은행연합회)
6.24(수)	㉞ 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간담회
6.26(금)	㉟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참석
6.29(월)	㊱ 서민금융지원 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6.30(화)	㊲ 메르스 관련 주요 피해업종 간담회 (프레스클럽)

II. 금융개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개혁 전반적인 평가 >

- ☐ 현장중심, 소통·협업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금융현장과 신뢰 형성중
- ①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금융당국의 소통 노력
 - ②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개선 추진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③ 금융당국이 아니라 학계·업계·컨설팅·IT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금융개혁회의가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
 - ④ 금융외연 확대를 위한 연금·외환·세계 분야 부처 협업과제 등도 논의 진전
- ☐ 금융개혁의 지속성과 체감도에 대한 현장 요구와 함께 연금·세계 등 타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성과 기대가 높은 상황
- ① 당국 실무자의 태도 변화가 여전히 미흡하고 “그림자 규제” 개선이 쉽지 않은 등 금융 현장의 애로가 지속
 - ② 정부의 금융개혁 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도 스스로 자율 책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
 - ③ 금융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非금융과 융합, 해외진출, 연기금 활용 등 외연확대 및 범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 앞으로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
-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

1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4.22)

가. 주요내용

- ①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 ② 검사과정에서의 직원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하고 대신 사실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교부
- ③ 개인제재 →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제재의 중심축 전환
 -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 금전제재 대상(과태료·과징금)을 확대하고 부과액수도 현실화 추진
- ④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의안건 열람권을 보장함으로써 반론권 강화

⇒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혁방안을 금융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15.하반기)

나. 기대효과

- ① 검사형태와 입증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당국의 검사권 집행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 강화를 통해 수검부담 완화
- ②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금융질서의 엄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당국에 대한 신뢰 확보

⇒ 검사·제재 혁신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

2-1 코넥스시장 활성화 (4.23)

가. 주요내용

- 코넥스시장 투자수요 확충
 -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코넥스 주식 편입비중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확대
 - * 필요 예탁금 규모 인하(3억원 → 1억원) 또는 예탁금 규제가 면제되는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순 납입액 3천만원 제한) 도입
- 유망 창업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
 -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에 장애가 되는 지정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상장 제도 도입
 - 코스닥 상장 SPAC이 코넥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 상장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코넥스 상장유인 확대

나. 기대효과

- 모험자본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혁신형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
 - 예탁금 인하(6.26), 코넥스 전용계좌 도입(7.27) 등으로 개인에게 모험자본 투자기회가 제공되고, 시장 유동성 확대
 - *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 ('14下)5.2 → ('15上)14.9 → ('15下, 추정)40.0
- 코넥스가 효율적인 중간회수시장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모험자본 생태계 활력 회복
 - 코넥스 시장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가능 금액은 연간 약 1,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재투자 등으로 벤처업계에 유입
 - * 투자회수가능액 = 연간 코넥스 거래대금 추정치 (약1.1조원) × 코넥스 시가총액중 벤처지분율(약15%)

2-2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4.23)

가. 주요내용

- ❑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거래단위 1/5축소) 도입
- ❑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 선물 등 신규 상품 도입

나. 기대효과

- ❑ 원지수상품으로는 곤란한 정밀한 차익·헤지거래기회 제공*

* 미니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 정교화 사례

- (원지수선물 이용) 16억 주식포트폴리오 헤지시 언더 또는 오버헤지 발생
예) $250p \times 50\text{만원} \times A\text{계약(헤지를 위한 선물매도금액)} = 16\text{억}$
· 원지수선물 12계약 매도시 언더헤지, 13계약 매도시 오버헤지 발생
- (미니상품 이용) 16억 주식포트폴리오 완전헤지 가능
예) $250p \times 10\text{만원} \times A\text{계약(헤지를 위한 선물매도금액)} = 16\text{억}$
· 미니선물 64계약 매도시 완전헤지 가능

- ❑ 그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단위로 인해 야기된 시장 유동성 축소 및 투자자 해외시장 유출 등 부작용 완화

- 홍콩('00), 일본('06) 등 경쟁국은 파생시장 유동성 유치를 위해 미니상품을 이미 도입·운영중

* 미니상품 도입후 5년간 관련시장(원지수+미니) 거래량증가율
: 항생지수선물 22.3%, 니케이225지수선물 48.0%

- 그간 국내 파생상품 소액투자 수요가 증거금 부담이 낮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으로 급격히 유출

* '14년 국내투자자의 해외지수 파생상품 거래증가율 :
S&P500 약 2,500%, EUROSTOXX50 약 500%, TOPIX 약 100%

- ❑ 주식관련상품에 집중되어 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는 전문가중심의 시장으로 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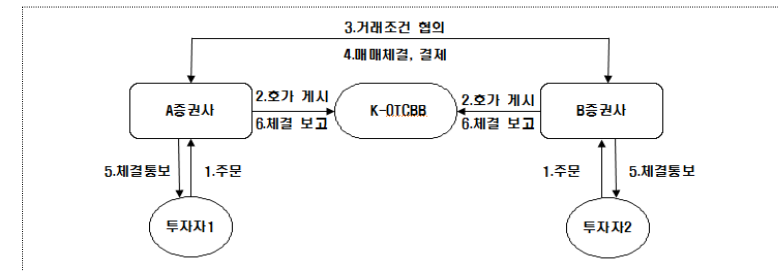
*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17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CME, Eurex 등 해외 주요시장은 100~1,800여개의 상품이 거래되며 소규모 니치상품 증가추세

2-3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4.23)

가. 주요내용

- ❑ 금융투자협회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장외 주식 유통을 위한 별도의 거래 플랫폼(K-OTC BB)을 추가 개설
- * 개설 초기에는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사모펀드·PEF·벤처투자조합 지분 등으로 거래대상을 확대

【 K-OTC BB의 매매 Flow 】



나. 기대효과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모험자본 시장	▶ 모험자본의 장외 회수기능 미약 (‘투자→회수→재투자’라는 모험자본 선순환구조에 병목지점으로 작용)	▶ IPO 및 M&A가 아니더라도 투자 회수가 용이 → 회수시장 활성화로 모험자본의 선순환 달성에 기여
투자자	▶ 허수호가 등 가격의 불투명성 높음 ▶ 결제불이행 등 거래위험 높음 (사인간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 투명한 가격결정(Anchor Price 기능) ▶ 결제 안정성 확보(증권사 중개) → 장외시장 신뢰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
창조융합 인프라	▶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상품 외에 신상품에 대한 거래플랫폼 부재 (창조적인 신상품 출시 저해요인 및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VC, 클라우드펀딩 지분 등 향후 출현 상품의 거래 인프라로 활용 가능 → 창조적 상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기능 작동 및 금융사 新수익기반 확대 기대

- ❑ 벤처업계 등에서는 벤처·중소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짐에 따라 벤처자금지원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3 핀테크 (Fin-tech) 활성화 (5.6)

가. 주요내용

- (진입 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5월) 등
-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3월) 및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협력 MOU 체결 지원 등
- (규제 패러다임 전환)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2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3월), 보안성심의(6월) 등 각종 사전규제 폐지
- (혁신적 서비스 출현 유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5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6월) 등

나. 기대효과

- 국민들의 편의 향상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 체	기대 효과	예 시
국민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 확대	결제 편의성 향상 금융 비용 감소 無 방문 계좌 개설
핀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전자금융업 진입 용이 청업 부담 감소 서비스 출시기간 단축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저성장 극복 금융업 국민 만족도 상승 해외시장 진출 신무기 보유

※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

- ▶ “핀테크 관련 규제는 이미 많이 완화된 상태”(핀테크 업체 대표, 5.26)
- ▶ “한국도 2~3년 안에 핀테크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성장”(LEVEL39 대표, 5.28)
- ▶ “핀테크 지원센터가 국내 IT·금융의 융합을 선도”(핀테크 스타트업계, 6.9)

4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5.18)

가. 주요내용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의 실명 확인시 “대면” 확인 원칙을 유지하되, “비대면”^{*} 확인도 허용

^{*}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 중 비대면 채널 비중이 약 90%를 차지

- 접근매체^{*} 발급에 대한 실명확인에서도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여 전반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대면확인 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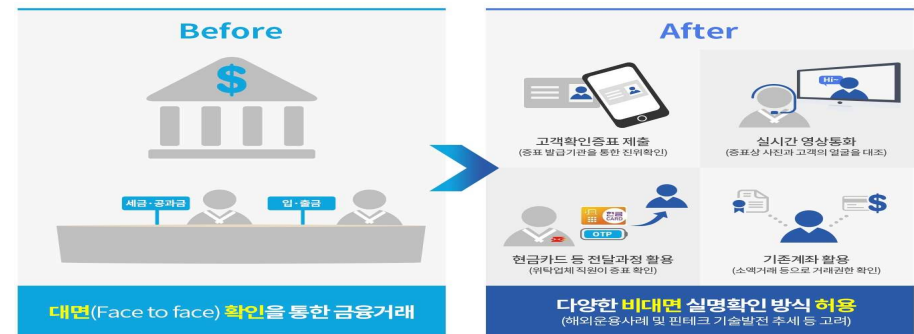
^{*}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또는 이용자·거래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예: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전자금융감독규정」)

-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2중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 중 2가지 “복수 방식” 활용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예: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포함)

- (권고사항)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나. 기대효과

□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요구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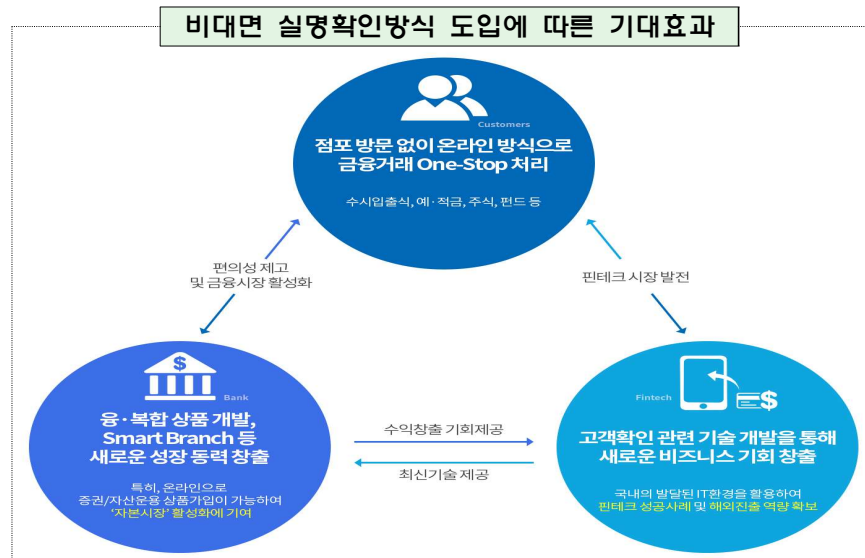
- 금융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령화 및 점포 감소 추세 감안시 비대면 확인방식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의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자본시장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점포 기반이 취약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가입이 한층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

□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시장 활성화

- 고객확인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핀테크업체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경험을 발판으로 해외진출 촉진



5 전자증권제도 도입 (5.21)

가. 주요내용

□ (배경) 현행 증권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문제점** 초래

* 예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실물증권이 발행(인쇄)되어야 하며, 예탁된 이후에도 투자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권을 실물로 되돌려 받아 유통

** ①실물증권 발행 비용 연간 약500억원 ②실물증권의 위조·분실 ③음성적 상속·증여에 따른 탈세 등

□ (내용)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

- 상장주식·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화 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전자화

나. 기대효과

① 실물증권 발행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절감

→ 5년간 약 4,4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추정)

* 실물증권의 제조·교부·보관,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② 거래정보가 실시간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

< 실물주식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사례 >

- A사 B회장은 부친사망 후 부친이 직원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서 상속세 41억여원을 포탈
- B회장은 직원명의 계좌로 자사주식을 매도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탈루

③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분실, 위조 위험 제거

→ 실물증권 분실·위조 규모 ('13년)

: 주식 525억원, 채권 707억원, CD 246억원 등

④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 등장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

6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 (5.26)

가. 주요내용

- (문제점) '04.10월 이후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 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의 제한적인 인가정책* 시행

* 4개 단종손보사, 2개 재보험사 허가

- 이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 보험수요에 대한 경쟁이 미흡
- (개선)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하여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 정비
 - 현행 보험종목별 허가 → 시장(상품)별 허가로 전환
 - 신규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복수종목 허가

나. 기대효과

- 다양한 전문적 보험상품의 출시가 촉진되어 소비자 만족도 및 시장 유효경쟁 제고 기대
 - 특정시장(상품)을 전담하는 전업보험사 출현시 시장수요에 맞추어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기대

※ (예시) 동 방식으로 인가정책 변경시, 상해/질병/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 출현 가능

현행							→	개선							
종목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비용	...	종목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비용	...
시장								시장							
여행보험								여행보험							
주택보험								주택보험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							

■ 여행 전업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 영역

7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6.1)

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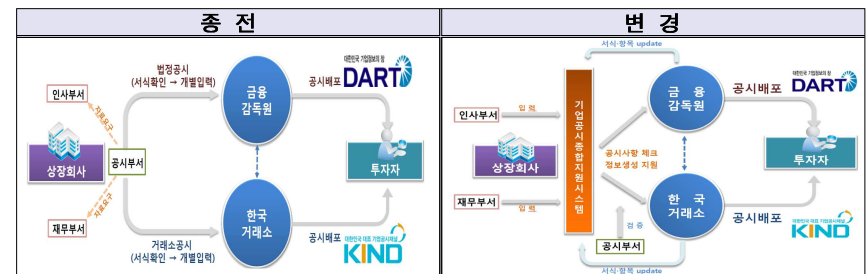
- '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5.19)에서 제기된 기업공시 담당자, 투자정보 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 (기업측) 과도한 공시부담 완화, 기업공시 자율성 확보 요구
 - (투자자) 신뢰성있는 정보의 적시성있는 제공 요구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나. 기대효과

- ①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여 정보생산 비용 획기적 감축
 - ※ (1단계) '15.6월~12월 (2단계) '16.3월까지



- ②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항목 축소 등을 통해 연간 2,300건(전년대비 약 6.7%)의 공시작성 부담 완화 기대(4/4분기)
- ③ 기타 투자자보호 정보제공 강화, 자율해명공시 도입, 허위공시 제재강화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완화 기대(3/4분기)

8 빅데이터 활성화 (6.3)

가. 주요내용

- ◇ 핀테크 발전의 한 축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
 - 빅데이터를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황) 외국에서는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
 -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우 핀테크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가 많지 않음
- (개선방안)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방안 마련
 -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 및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 마련(~9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 지원

나. 기대효과

-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 핀테크 기업은 비식별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협력 및 경쟁이 가능
-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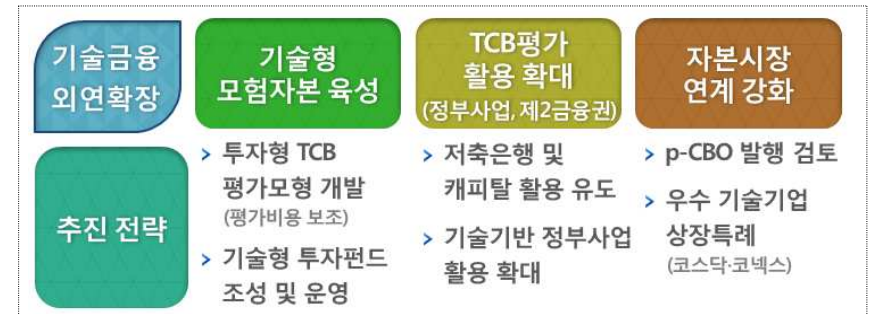
9 기술금융 개선 (6.8)

가. 주요내용

①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개선



②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기술평가 기반 투자로 확대



나. 기대효과

- ①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인 '18년에는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1/3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
 -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15.2월) : 319.2조원
- ②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생태계가 조성

가. 주요내용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

-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보완장치 마련(은행법 개정사항)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 :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강화
 -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대폭 완화(은행법 개정사항)
 -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나.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 점포방문 없이 은행이용 가능, 낮은 금리·수수료 적용 >

-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예상

※ Hello Bank(프랑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

-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 WeBank(중국):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SNS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

< 은행 산업 :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 은행간 경쟁 촉진 >

-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

※ Rakuten Bank(일본):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 →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

< 국민 경제 : IT·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 → 일자리 창출 >

-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 효과,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도 기대

※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천여명의 고용 창출 사례, ING Direct(네덜란드): 적극적인 해외진출 → 독, 프, 이 등 6개국에서 사업영위 중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6.18) 발표후 대부분 언론에서 한국형 핀테크 성공의 관건이라고 평가하며 주요 기사로 보도

* 조선 : 金産분리 빚장 풀어... 인터넷은행, 年内 1~2곳 인가(6.19)
 한경 : '세계는 핀테크 경쟁' 시리즈 시작 ① 진화하는 인터넷은행(6.19)
 매경 : 인터넷은행 연내 1~2개 탄생...휴대폰으로 계좌개설부터 대출까지(6.19)

◇ 다음카카오 등 ICT기업, 미래에셋 등 제2금융권도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

11 금융규제개혁 [6.15]

가. 주요내용

1 금융규제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

- 규제 유형화 → 유형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선 원칙 설정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 과도한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영업행위 → 폐지 또는 완화

- 금융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을 적용(Top-Down)하고, 현장 점검반 발굴(Bottom-Up) 제도개선 과제를 규제개선안에 반영

- *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2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혁파

- ①법적 근거 없는 규제 일체 정비, ②적극적 유권해석(No Action Letter) 활성화, ③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실태점검

3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 ①금융규제 움부즈만 제도 도입, ②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 ③규제비용총량제 준비, ④「금융규제 운영규정*」 도입

- * 규제개혁방안, 가격·수수료 등의 경영상 개입 통제 등 금융위·금감원이 향후 규제·감독 과정에서 지켜야할 내부규범

나. 기대효과

- 금융규제개혁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

➡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원칙 정립

- 금융규제정비의 달인 9월~12월까지 매월 규제개선안 발표 예정

* 건전성(9월)→영업행위(10월)→시장질서·소비자보호(11월)→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12월)

12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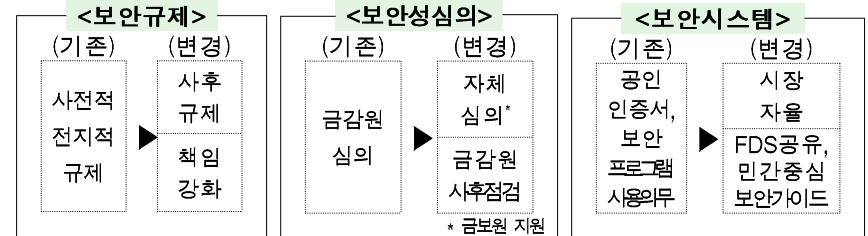
가. 주요내용

- 민간 부문의 자율책임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 중

- 정보보안 및 IT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실질적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 마련(6.18)

➡ ‘핀테크 활성화’와 ‘보안강화’가 조화롭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자율 보안체계 확립’

< IT보안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나. 기대효과

1 시장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보안기술 개발·이용 촉진

- ☞ 규제 폐지 이후, IT기업 등이 생체인증 솔루션, 스마트OTP 등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방법들을 속속 개발 및 금융회사에 도입중(언론보도)

2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 발굴·보완 등 자체 보안성 강화방안 수립 및 내부감사 일상화로 보안수준 향상

-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내부 보안성심의 강화, 보안내재화 방안 수립 등 자율보안 시대 준비로 분주(언론보도)

3 전 금융권 FDS 정보공유 및 보안협의체 활성화 등 금융권 전반의 보안대응 수준 및 침해대응 능력 향상

- ☞ 카드 부정사용시도 등 이상거래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 효과적으로 부정사용 차단 가능(규제개혁 현장점검반 수립 의견)

①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금감원·금융협회·금융보안원)

- * (현행)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IT감사요원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IT감사 미흡
- * (개선) IT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감사요원 양성프로그램 마련

②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수준 합리화 (금감원)

- * (현행) 최근 전자금융거래 규모·사고 등에 비해 보험금액이 낮음('06년 이후 개정 없음)
- * (개선) 거래규모나 사고추이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행 보험금 상향 기준 마련

③ FDS 정보공유체계 구축 (금융보안원)

- * (현행) 금융사는 자체 FDS 시스템을 운영중이나, 정보공유체계가 없어 효과적 대응 미흡
- * (개선) FDS 정보공유를 위한 업계 공통기준 마련 및 공유시스템 구축

④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 * (현행) 금융정보보호협의회, OSO협의회 등으로 분산 운영, 전자금융업자는 채널 자체가 없음
- * (개선) 금융보안 협의체를 다각화·활성화하여 사고사례 전파 및 규제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

⑤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금융협회·금융보안원)

- * (현행)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사 자체 보안정책 수립시에 참고할 가이드 요구 증가
- * (개선) 민간 자율의 보안 가이드 및 관련 지침 등을 적기에 마련

⑥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금융보안원)

- * (현행) 금감원 보안성심의제도 폐지 및 금융사 자체 보안성 검토로 전환
- * (개선) 그간의 보안성심의 주요 사례를 제공하고, 보안성 검토 지원 프로세스 마련

⑦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체계 구축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 * (현행) 핀테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보안성 검증체계 미비
- * (개선)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 기술의 보안 컨설팅 지원

⑧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금감원)

- * (현행) 금융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품질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분석·평가가 어려움
- * (개선) 보고서 표준양식 마련, 보안규정 준수현황 분석 및 현장검사시 활용 등

가. 주요내용

① (겸업 칸막이 제거)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를 지원

- *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서류접수 업무, 입·지급, 증명서 발급, 환전 등 부가적 금융서비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의 위탁 허용

-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직원겸직 제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업무위탁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완화

< 겸직규제 개선 내용 >

구분		현행	개선
임원	등기	대부분 겸직허용	대부분 겸직허용
	미등기	59개 중 51개 금융업무 겸직금지	대부분 겸직허용
영업담당 직원		금융업무 겸직금지	28개 핵심업무만 겸직금지
신용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담당 직원		겸직금지	겸직 허용

② (정보공유 촉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촉진

- * 1개월내 정보공유, 위험관리법규 준수 목적 등의 정보공유에 대한 사전승인 면제 등

③ (해외진출 지원) 자회사등의 해외법인에 대한 무담보 신용공여 및 금융지주의 보증 허용으로 영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

④ (신사업 진출 지원) 핀테크,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

- * '리츠, 선박, 해외자원개발, 로봇, 공간정보, 엔지니어링' 투자회사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에 대한 투자 허용, 회사형 공모펀드 설립 제한 폐지 등

나. 기대효과

① (겸업 시너지 제고) 활발한 업무위탁, 겸직, 그룹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가 기대

- 고객은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One-stop 서비스 이용 가능
- 금융지주그룹은 은행 지점망*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음

*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② (신성장 동력 발굴)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신시장* 진출, 금융 융합 추세에 따른 투자처 다양화 등을 통한 新수익원 창출로 금융지주의 재도약 기대

* '14말 은행 순이자마진(%) : 한국 1.79, 미국 3.12, 베트남 3.18, 인니 3.73

** 금융지주그룹 해외법인의 해외지점 확대 계획

('14) 149개 → ('15) 177개 → ('16) 192개 ('14말 대비 43개 지점 증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Moody's의 평가>

- ('15.7.25 Moody's Credit Outlook) 금융지주의 영업효율성 및 위험 관리 개선으로 지주와 자회사등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
- 이번 조치로 수익원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배당금 지급 부담이 큰 지주 소속 은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웅이한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인력운용의 융통성 확대로 지주 그룹의 영업효율성이 강화되고,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은행의 위험관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통합 위험관리에도 긍정적 효과

14

관계부처 협업과제

가. 외환제도 개혁방안 [기재부]

-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기업의 대외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 외환 지급·수령과정에서의 사전 확인 절차 및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를 전면 개편하는 등 실질적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
- 증권·보험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범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외환 이체업 도입 등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다만,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나.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 기재부, 중기청]

- 중소·벤처투자의 양적인 성장에 맞추어 질적 고도화와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벤처·창업 붐 확산
- 민간자금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주도의 생태계로 전환
-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엔젤·VC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
- 규제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육성과 경영지원 등 비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다. 금융세제 개선방안 (금융위, 기재부)

- 과세 정합성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 추진
 -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 과세토록 개선
 - 예·적금, 펀드 등 계좌내 상품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칭)' 한시 도입

※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상기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기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진행중

라.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 (금융개혁 자문단, 복지부 협의필요)

- ① (연기금 운영 개선)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탁 평가 및 관리를 강화
 -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사의 공동투자 유도, 이머징마켓 등에 투자경험·능력이 있는 국내 금융회사 발굴 등을 추진
- ② (사적연금 제도개선) 연금자산의 운용을 효율화하고, 연금 가입과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 일임형,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해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개인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운용 유도

III. 향후계획

- 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 추진
 - 거래소 개편(7월),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8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8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9월) 등 추진
- ② 검사·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평가도 추진
- ③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 발간

< 주요 개혁과제 추진 일정 >

일 정	주요 과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개편 ▪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제도 ▪ 복합점포 활성화 ▪ 해외진출 활성화 등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제재제도 개선 ▪ 금융세제 개선 ▪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 등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개혁 ▪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 ▪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강화 ▪ 정책금융역할 강화 등
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발굴과제 논의 ▪ 금융개혁 추진현황 점검·보완 ▪ 금융개혁 백서 작업

첨부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

- (조사주체·시기) 한국 갤럽(전화 설문), 6.25일 ~ 6.29일
- (대상) 총 600여명의 인력 풀 중 110명 샘플링
 - 금융권 CEO(10인), 금융권 실무자(60인)
 - 학계/연구원(20인), 언론(10인), 기술금융 기업/IT 기업(10인)

①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①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 80%

* 매우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0.9), 보통(19.1), 그렇다(47.3), 매우 그렇다(32.7)

② 현장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58.2%

* 매우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4.5), 보통(37.3), 그렇다(35.5), 매우 그렇다(22.7)

③ 기존의 제도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도 60%

* 매우 그렇지 않다(1.8), 그렇지 않다(10), 보통(28.2), 그렇다(42.7), 매우 그렇다(17.3)

- 학계/연구원의 평가(45%)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

④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83.6%가 만족감 표시

* 매우 불만족(0.9), 불만족(15.5), 만족(64.5), 매우 만족(19.1)

② 현장점검반을 높게 평가. 특히, 금융업 실무자의 평가가 높음

①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3%[의견수렴에 대한 전반적 평가(58.2%)보다 매우 높음]

*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1), 보통(14.6), 그렇다(47.9), 매우 그렇다(34.4)

- 금융업 실무자는 96.5%가 긍정 응답 [나머지 3.5%는 보통]

②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6%,

* 매우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4.2), 보통(31.3), 그렇다(43.8), 매우 그렇다(20.8)

③ 현장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6.7%

③ 반면,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

①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

* 매우 그렇지 않다(8.3), 그렇지 않다(26), 보통(43.8), 그렇다(13.5), 매우 그렇다(8.3)

②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여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에 비해 낮음

* 매우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다(13.6), 보통(44.5), 그렇다(36.4), 매우 그렇다(5.5)

- 언론(10%) 및 금융업 실무자(36.7%)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특히 낮음

-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불만족을 표시한 18인(16.4%)이 뽑은 가장 큰 이유*도 개혁의 체감도 부족(50%)

* 체감도 부족(50%), 비공식 행정지도 등 당국 실무자의 태도(16.7%), 의견수렴부족(16.7%), 시급성이 없는 과제(16.7),

④ 금융회사의 자체 혁신노력이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업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시각차가 매우 큼

① 금융회사가 자체 혁신노력을 잘 하고 있다

- 금융업 CEO(50%), 실무자(80%) Vs. 학계/연구원(10%), 언론(10%)

② 규제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이 확립되어 있다

- 금융업 CEO(50%), 실무자(85%) Vs. 학계/연구원(5%), 언론(0%)

⑤ 개별 개혁과제에 대한 평가

① 수립된 개혁방안 중 '검사 및 제재 개혁'(50.9%)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26.4%)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반응

② 향후 검토될 개혁 과제 중에서는 '금융규제 개혁'(46.4%)과 '금리 등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32.7%)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큼

< 참고 > 설문내용과 응답결과

질문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	잘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계
전체	110	47.3	39.1	13.6	100
CEO	10	100	0	0	100
학계/연구원	20	50	45	5	100
언론기관	10	70	30	0	100
금융업	60	36.7	48.3	15	100
기업	10	30	20	50	100

질문2)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110	0	0.9	19.1	47.3	32.7	100
CEO	10	0	0	10	30	60	100
학계/연구원	20	0	0	20	35	45	100
언론기관	10	0	0	0	50	50	100
금융업	60	0	0	23.3	51.7	25	100
기업	10	0	10	20	60	10	100

질문3)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110	0	4.5	37.3	35.5	22.7	100
CEO	10	0	0	10	40	50	100
학계/연구원	20	0	5	30	40	25	100
언론기관	10	0	10	30	50	10	100
금융업	60	0	5	41.7	31.7	21.7	100
기업	10	0	0	60	30	10	100

질문4)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110	0	13.6	44.5	36.4	5.5	100
CEO	10	0	0	30	60	10	100
학계/연구원	20	0	15	35	50	0	100
언론기관	10	0	10	80	0	10	100
금융업	60	0	16.7	46.7	31.7	5	100
기업	10	0	10	30	50	10	100

질문5) 금번 금융개혁은 기존에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110	1.8	10	28.2	42.7	17.3	100
CEO	10	0	0	10	50	40	100
학계/연구원	20	5	25	25	35	10	100
언론기관	10	0	20	20	60	0	100
금융업	60	1.7	3.3	38.3	38.3	18.3	100
기업	10	0	20	0	60	20	100

질문6) 현장 점검반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응답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
전체	110	87.3	12.7	100
CEO	10	90	10	100
학계/연구원	20	75	25	100
언론기관	10	100	0	100
금융업	60	95	5	100
기업	10	50	50	100

질문7)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96	1	2.1	14.6	47.9	34.4	100
CEO	9	0	0	22.2	22.2	55.6	100
학계/연구원	15	6.7	6.7	26.7	46.7	13.3	100
언론기관	10	0	0	60	30	10	100
금융업	57	0	0	3.5	52.6	43.9	100
기업	5	0	20	0	80	0	100

질문8) 현장애로에 대한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전체	96	0	4.2	31.3	43.8	20.8	100
CEO	9	0	0	22.2	55.6	22.2	100
학계/연구원	15	0	0	60	40	0	100
언론기관	10	0	0	40	50	10	100
금융업	57	0	5.3	26.3	42.1	26.3	100
기업	5	0	20	0	40	40	100

질문9) 감독당국의 지침, 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96	8.3	26	43.8	13.5	8.3	100
CEO	9	11.1	11.1	44.4	33.3	0	100
학계/연구원	15	6.7	20	60	6.7	6.7	100
언론기관	10	20	30	30	10	10	100
금융업	57	7	28.1	45.6	12.3	7	100
기업	5	0	40	0	20	40	100

질문10) 현장점검반이 일시적 기구가 아니라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96	1	10.4	21.9	30.2	36.5	100
CEO	9	0	11.1	11.1	44.4	33.3	100
학계/연구원	15	0	33.3	0	46.7	20	100
언론기관	10	10	0	40	20	30	100
금융업	57	0	7	22.8	26.3	43.9	100
기업	5	0	0	60	20	20	100

질문11) 정부의 금융개혁에 발맞추어 금융회사들도 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110	2.7	10	30.9	40	16.4	100
CEO	10	0	0	50	50	0	100
학계/연구원	20	10	35	45	10	0	100
언론기관	10	10	20	60	10	0	100
금융업	60	0	0	20	53.3	26.7	100
기업	10	0	20	20	40	20	100

질문12)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응답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110	3.6	14.5	25.5	37.3	19.1	100
CEO	10	0	0	50	20	30	100
학계/연구원	20	15	40	40	5	0	100
언론기관	10	10	60	30	0	0	100
금융업	60	0	1.7	13.3	56.7	28.3	100
기업	10	0	10	40	40	10	100

질문13)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계
전체	110	0.9	15.5	64.5	19.1	100
CEO	10	0	0	70	30	100
학계/연구원	20	0	25	65	10	100
언론기관	10	10	20	50	20	100
금융업	60	0	15	68.3	16.7	100
기업	10	0	10	50	40	100

질문13-1)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습니까?

	응답자	현장점검반 운영 등 현장중심 개혁추진	신속한 회신, 낮은 자세 등 금융당국의 자세 변화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중심의 개혁 추진체계	거대담론이 아닌 시급한 과제 우선의 개혁과제	계
전체	92	46.7	28.3	14.1	10.9	100
CEO	10	40	30	10	20	100
학계/연구원	15	33.3	33.3	20	13.3	100
언론기관	7	57.1	28.6	14.3	0	100
금융업	51	54.9	25.5	13.7	5.9	100
기업	9	22.2	33.3	11.1	33.3	100

질문13-2)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응답자	개혁의 체감도 부족	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개혁과제	비공식 행정지도 등 시급한 과제 실무자의 태도	계
전체	18	50	16.7	16.7	16.7	100
학계/연구원	5	60	20	20	0	100
언론기관	3	33.3	0	66.7	0	100
금융업	9	44.4	22.2	0	33.3	100
기업	1	100	0	0	0	100

질문14) 현재까지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효과가 큰 과제는?

	응답자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인터넷전문 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개혁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코넥스시장 활성화	계
전체	110	50.9	26.4	11.8	7.3	3.6	100
CEO	10	80	20	0	0	0	100
학계/연구원	20	35	25	20	15	5	100
언론기관	10	40	0	10	30	20	100
금융업	60	58.3	31.7	5	3.3	1.7	100
기업	10	20	30	50	0	0	100

질문15) 앞으로 발표될 개혁과제 중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금융규제 개혁	금리 등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거래소 개편	금융교육 강화	계
전체	110	46.4	32.7	9.1	7.3	4.5	100
CEO	10	40	40	20	0	0	100
학계/연구원	20	35	35	5	20	5	100
언론기관	10	10	10	30	20	30	100
금융업	60	55	35	5	3.3	1.7	100
기업	10	60	30	10	0	0	100

1. 활동성과

가. 추진현황

-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설치(3.26일 출범)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6월 셋째 주까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약 2천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 요청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신청건도 3개월 동안 약 100건 접수

(단위: 건)

감독관행·제도개선	법령해석·비조치의견	현장답변	총계
1,437 (74%)	97 (5%)	400 (21%)	1,934 (100%)

- 1~9주차까지 접수한 총 건의사항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081건(수용률 47%) 전부 회신 완료

* 수용: 508건, 불수용 281건, 추가검토 292건

나.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 ① 신(속)·적(극)·성(실)의 3원칙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 현장점검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회사 실무자(차장, 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
 -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는 건의 과제에 대해 “틀”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신속히 회신(14일 원칙)
 - ➡ 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

② 금융회사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 현장점검반 안내 및 접수 등*을 통해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제도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개설(3.31일), 현장점검반 활동(4.2일~) 및 금융위원장의 BC카드사 방문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전달(4.8일) 등이 계기

** (지난 5년간 비조치의견서) 4건 → (현장점검반 운영 후) 39건

- ➡ 법령개정 등 없이도 금융회사가 바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성, 편의성이 제고

③ 현장점검반 건의 과제가 실제 금융 및 관행 개선으로 연결

- ➡ 금융회사 건의 과제가 실질적인 개혁 조치로 이어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금융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

< 현장점검반 통한 건의 과제가 금융 제도 및 관행개선으로 이어진 사례 >

- ①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발급 허용('15.4.8, 유권해석)
 - 실물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카드 발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의제고
- ②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 온라인 송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집과 사무실에서 계좌개설
- ③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등간 겸직규제 및 업무위탁 완화
 - 해외법인 임직원 겸직 사전승인 폐지, Two Bank 체제에서 입출금 업무 허용 등 상호위탁 허용을 통해 소비자편의 및 시너지 제고
- ④ 전산설비 외부위탁 관련 규제 완화(승인→보고)
 - 전산설비 위탁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사전승인에서 보고로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따른 부담 해소

다. 향후계획

-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
-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하여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

*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금융업 협회 등을 통해 금융권 전체 공유

2. 건의과제 및 처리현황

1. 건의실적

< 건의과제 접수현황(1~12주차) >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누적(건)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① 감독·검사·제재 관행	65	54	41	28	188
② 제도개선(법령개정)	150	470	333	296	1,249
③ 법령해석	5	32	30	13	80
④ 비조치의견서	0	8	3	6	17
○ 현장조치	155	68	50	127	400
합계	375	632	457	470	1,934

2. 제도개선 등 처리현황

< 건의과제 처리현황(1~9주차) >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건)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소 계	148	378	297	258	1,081
① 수용	81	187	125	115	508
② 불수용	31	91	80	79	281
③ 추가 검토	36	100	92	64	292
수용률(%)	55	49	42	45	47

3.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 177건(현장점검반 84건, 규제포탈 93건) 접수, 105건 회신 완료

구분	현장점검반 접수		규제포탈 접수		소계(건)		계
	법령해석	비조치	법령해석	비조치	법령해석	비조치	
회신완료(4.1~6.26)	48	6	40	11	88	17	105
회신예정	24	6	26	16	50	22	72
접수 총계	72	12	66	27	138	39	177

* 현장점검반에 접수되었으나 공식 요청서 작성 중 또는 철회된 건수는 미포함

3. 현장반응 (에피소드)

1. “할말이 많습니다” (A증권)

- 최근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했던 A증권사는 현장점검반 방문을 영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 무려 3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사전에 준비
- 현장점검반은 당초 A증권사를 하루만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증권사의 현장 점검반에 대한 기대와 건의 건수를 감안하여 방문 일자를 이틀로 확대하고, 건의 사항을 면밀히 청취

2. “말씀드리기 참 편하네요.”(B보험사)

- B보험사가 단종보험대리점 취급항목에 보증보험을 추가 요청 하는 내용의 건의를 하고 있었으나,
 - 일반인에게 생소한 보증보험에 대한 현장점검반의 이해 부족과 상품에 대한 회사의 미진한 설명으로 인해 초반 건의사항 개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현장점검반의 팀원 가운데 작년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알게 되었던 이가 해당 상품을 예로 들어 회사의 설명을 용이하게 도와주자, 실무담당자는 “생각보다 말씀드리기 참 편하네요.”라는 반응
- 금융당국에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회사는 예상외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회사에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현장점검반에 만족감을 표시

3.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날 시간에 영업을 하나라도 더 뛰는게 낫죠” (C증권사)

- ☐ 기존의 간담회와 달리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접수한 결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비교적 여과 없이 표출
- ☐ 차장인 현○○씨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찾아가 만날 시간에 영업을 더 하는 것이 솔직히 더 낫다”며, 그간의 당국의 소통이 형식적이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
- ☐ 현장점검반을 통한 금융개혁이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도 현장의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충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4.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행정지도는 폐기되었으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D은행)

- ☐ 현장점검반은 현장 방문시 “현장 안내문”을 통해 현재까지 유효한 행정지도 리스트를 설명하고 업계와 공유
- ☐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행정지도 외의 행정지도는 폐기되어 효력이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려는 모습
 - 특히,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위가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폐지된 행정지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반에 “동 지도대로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재차 문의
- ☐ 이는 금융회사의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독당국의 감독 관행이 그만큼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어 온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음

5. “제안하신 내용은 말이죠.... 하셔도 되는 겁니다”(E은행)

(case1)

- ☐ E은행의 한 실무자는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계열은행으로부터 차입 가능한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질의
 -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위 “어려워” 이런 문의를 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다 현장점검반의 금융회사 방문을 계기로 용기를 내볼 수 있었다고 밝힘
- ☐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현장점검반과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 현장점검반 역시 면담 과정에서 건의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다”고 답변
- ☐ 질의자는 본인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던 사안이 현장에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case 2)

- ☐ E은행의 박OO 과장은 외부업체를 통해 IT시스템을 개발할 때 은행 외의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사항이 과도한 규제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장점검반 방문시 은행내 장소에서 용역업무 수행 허용을 건의
- ☐ 현장점검반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박OO 과장의 해석에 일부 오해가 있으며, IT시스템 개발 용역업무는 은행 내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 즉시 답변
- ☐ 박OO 과장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했던 점이 현장점검반을 만나서 한 순간에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6. “금융업 경쟁력 이대로는 안됩니다”(F증권)

- ☐ 현장점검반이 외국 증권사인 F증권사를 방문했을 때 회사 대표 이OO씨는 따로 현장점검반과의 면담을 요청.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
- ☐ 우리나라의 각종 금융 규제들이 한국 금융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면서, “금융경쟁력이 대만에 비해 서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
- ☐ 한편, 현장점검반을 통한 금융개혁이 기존과는 달리 철저하게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기식 금융개혁”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반을 통한 건의사항이 보다 적극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

7. “들어라도 주니까 속은 후련합니다”(G신협)

- ☐ 지역 소재 신협 G를 방문했을 때 실무자는 그동안 현장점검반에 제기된 과제중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음
- ☐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하는데 힘만 빠지는거 아니냐면서, 보다 전향적으로 감독당국이 건의 과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토로
 -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불만사항들도 허심탄회하게 전달
- ☐ 면담 후 건의자는 “수용여부와 상관 없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금융당국 실무자가 금융당국에 기탄 없이 건의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

8. “불수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패자부활의 기회이니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H은행)

- ☐ H은행 차장 최OO씨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된 과제를 은행 연합회를 통해 공유 받고, 그동안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 다만, 검토 결과가 “불수용”으로 나온 것을 알면서도 해당 은행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쉬웠음
- ☐ 이에 따라 현장 점검반 방문시 “동 내용이 불수용으로 검토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숙원하는 사안인 만큼,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면서, 거듭 의견을 제시
- ☐ 현장점검반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을 소관부서에 전달함으로써 감독당국과 업계간 온도차를 낮추는 데도 노력

9. “인터넷 보험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I보험사)

- ☐ 현장방문을 시작한 첫날에 방문한 I인터넷 보험회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당시 개발중인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시연해 줌
 - 덕분에 현장점검반은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과정을 이해하고, 계약 체결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는 I보험사는 비록 영업규모나 인력 등 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현장점검반 방문을 인터넷 보험회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함

11.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설계사 대신, 대표인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H법인보험대리점)

-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개인제재 중심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함
 - 신분상 제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음
- ☐ 그러나 H법인보험대리점 대표는 생계형 설계사들의 보호를 위해 기관을 제재하는 대신, 대표를 제재해달라고 요청
 - 예를 들어 기관에 대해 ‘손해보험 3개월 신계약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지면, 소속 설계사 수천명의 보험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
- ☐ 이처럼 현장점검반을 통해 규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12. “연예인을 본 느낌이에요”(J은행)

- ☐ 부산 소재 J은행의 차장 김○○씨는 부산을 방문한 현장점검반을 보고 건의사항을 제기하기 전 꺼낸 첫 마디가 “연예인을 본 느낌입니다”였음
- ☐ 평소 금융위, 금감원 직원을 직접 볼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종종 협의를 하곤 했던 은행연합회 직원조차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
- ☐ 김○○씨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점검반과의 만남을 마치 TV로만 보던 아이돌을 직접 본 느낌이라고 평가